동양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

개정 2024.8.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에 따라 동양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공익침해행위" 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다.
 - 2. "공익신고" 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.
 - 가.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
 - 나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 익신고를 한 경우
 - 3. "공익신고등"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4. "공익신고자"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 - 5. "공익신고자등"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동양대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(이하 "교직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- **제4조(신고의무)** ①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.
 - ② 공익신고자가 타인의 음해성 및 고의적인 명예실추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 치 될 수 있다.
- **제5조(책무)** ① 대학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학은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익신고)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관부서(이하 "주관부서")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.
 - ②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 담당 업무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.

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

- **제7조(공익신고 상담)** ① 주관부서에서는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- ②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서(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)를 제공한다.

- 제8조(공익신고의 접수) ①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·우편·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 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9조(공익신고 방법) ①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신고서의 기 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공익신고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 - 2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 - 3. 공익침해행위 내용
 - 4.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 - 5.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
 -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 - ③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신고의 취소)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"종결" 처리할 수 있다.
 -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,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

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

- 제11조(공익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)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,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·송부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이첩·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⑥ 공익신고의 송부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후 송부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익신고의 종결) ①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.
 - 1.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- 2.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 - 3.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
- 4.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- 5.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 가 없는 경우
- 6.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- 7.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
- 8.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- 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

- 제13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.
 - 1.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· 사진 · 생년월일 · 전화번호 · 주소 · 근무처 등 인적사항
 - 2.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
 -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공익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 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 ① 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대학은 구성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공익신고자 보호) 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고	<u>ల</u> ા	V	7	서
0	_			7.1

공 익 신고 서							
접수일자			접수번호			처리기	간
	이름			주민등록	번호		
신고자	주소		1				
	연락처			소속			
피신고자	이름						
	소속			주소			
	직위			연락처			
신고내용							
신분공개 동의여부	 심사・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・확인하는 과정(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·보상 절차 포함)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[]동의 []부동의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・수사기관에 이첩(송부)되는 경우,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・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(송부)하게 됩니다. []동의 []부동의 						
 타기관				감독기과 :	들에 신고시식 역	있음	
신고 및 쟁송		고기관 :	에 8 기년의 신고			^{^^} ㅁ 결과 :)
여부 등	[] 민사	· 형사행정소송	또는 행정심	판 및 이에	준하는 절차 전	<u>l</u> 행 중 ()
		에 대하여 신		-			<u> </u>
					_	월 일	
				신고	자	(인 또는 서명)

감 사 실 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_필수제출 - 계 속 -				
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	711 -			
공익침해 행위의 증거 (증거자료 등 첨부서류)				